



〈 호 소 문 〉

두 번째 '종교살인'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또다시 기독교계 기성교단의 종교 탄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강제개종교육의 근절과 이를 사주하는 개종목사의 처벌을 청와대 탄원 등을 통해 요구해온 20대 여성이 2017년 12월 29일 전남 화순의 외딴 펜션에 갇혀 사망한 상황에서 부모에 의해 코, 입이 틀어 막혀 질식사했다.

고인은 지난 2016년에도 개종사업을 하는 목사의 기획 하에 납치, 감금당한 채 44일이나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에 고인은 죽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외쳤다.

고인은 지난해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 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고인이 남긴 국민신문고의 글에 귀 기울이고 이 호소에 대통령과 사법당국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의 사망은 가족들에게 '자녀가 종교에 빠졌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례금을 받고 납치, 감금, 결박을 가족들에게 지시해 장기간 비방교육을 하는 전형적인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2007년 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찾아와 40대 여성을 망치로 때려 사망케 한 사건 이후 두 번째 '종교 살인' 이다. 울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역시 개종목사와 소속 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분노를 유발케 해 납치, 감금, 폭행을 사주하는 개종 목사들의 돈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기성교회의 한 목사는 2015년 모 언론사 기고 칼럼을 통해 '살인을 한 전 남편이 이해된다'는 주장을 펴 개종사업을 바라보는 목사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모든 불법행위를 가족들에게 하도록 지시하고 개종목사 본인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도록 짜여지는 강제개종사업은 결국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지만 정작 개종목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 결박, 폭행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강제개종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개종사업가인 진 모 목사는 개종사업이 돈이 된다면 목사들에게 이를 권장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20대 여성이 납치된 직후 경찰이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종교문제' '가족문제'란 이유로 방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이 여성은 죽음에 이르렀고 경찰은 실종자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사법당국에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촉구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개종사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누가 저들에게 국민을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살인까지 사주하는 그들의 실태를 직시하고 대책을 세우라.

이번 20대 여성의 질식사에 대한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라. 딸의 죽음으로 한 가정이 처절하게 파괴된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을 발본색원하라. 다시는 이 땅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입이 틀어 막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종교육을 돈벌이로 하는 개종목사들을 엄하게 처벌하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2018년 1월 23일